

[비상]광우병전문위 '관보고시 대국민사기극'

8 노동과세계 | © 승인 2008.06.26 11:22

26일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전문가자문위 긴급 기자회견 열고 한미쇠고기 추가협상 관보고시 기만성 조목조목 비판

[사진1]
2정부가 미국 쇠고기수입 관보고시를 강행하고 민주노총이 즉각 총파업과 운수저지 투쟁에 본격 돌입하는 등 대정부 투쟁이 전면화됐다.

또, 정부의 26일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제품 수입위생조건 관보고시 강행 관련해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전문가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가 이를 '검역주권 팔아먹은 대국민사기극'이라고 일축했다.

자문위는 26일 오전 10시 프레스센터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90점짜리라던 한미쇠고기 추가협상은 광우병위험을 줄일 수 없는 대국민사기극일 뿐'이라고 비판하고 이명박정부는 쇠고기 고시강행을 중단하고 전면재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전문가위가 한미쇠고기 추가협상을 '대국민사기극'으로 규정한 이유는 △미국 목축업자의 자발적 품질향상프로그램에 불과한 미 품질보증평가프로그램(QSA) 신뢰 문제 △미국 수출검역증명서 발급단계에서의 QSA 확인방법 부재 △광우병위험특정물질 미해결 △검역위반 발견시 한국정부 관여 불가(수입위생조건 7조와 8조) △원래의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위한 조치에 불과하다는 등 5대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일방 강행한 관보고시 자체가 행정절차법에 의거한 입법예고절차를 위반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자문위는 이날 "추가협상 결과문서를 고시에 앞서 공개하고 국민의견을 물어야 했지만 이같은 입법예고절차조차 지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자문위는 즉각 재협상을 촉구하면서 이명박정부 심판투쟁 돌입을 경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보건의료연합 김정범 공동대표를 비롯해 우석균 보건의료연합 정책실장, 박상표 국민건강수이사연대 정책국장, 신영전, 이혜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사진2]
<<각급 발언전문>>
신영전=연일 시위로 국민도 힘들겠지만 기자들도 힘들 것이다. (10:20 기자회견 시작) 한미추가협상 관련 소식이 공개됨에 따라 자문위 입장을 발표하는 시간이다. 기자회견문 낭독, 전문가 발언, 참가단체 발언, 기자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한다. 보건의료연합공동대표 김정범이 낭독한다.

<<전문가 발언>>
박상표 국민건강수이사연대 정책국장=아침에 수입위생조건고시를 강행했다. 문제점은 30개월 프레임에 국민을 가뒀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SRM이다. 한 글자도 바꾸지 못하고 오히려 혹을 더했다. 30개월 이상 또는 미만이든 뇌·머리뼈·안구·척수는 광우병위험물질이다.

미국을 제외하고 베트남 일본 중국 코스타리카 등 모든 국가에서 위험물질로 규정하고 제거한다. 장 전체를 위험물질로 지정하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정부는 문구하나 바꾸지 못했고 민간업자 수입요청이 없을 경우 들여와 문제가 발생하면 돌려준다는 정도다. 국민생명과 안전 건강이 심각한 위협에 처하게 됐다.

급창·허·회수육·분쇄육은 위험물질이거나 섞여있는데 이런 부위마저 하나도 제거 못했다. 허뿌리에 위험물질 편도조직이 포함돼 있다. 현미경 조직검사라도 100% 확인이 불가능하다. 급창의 경우 파이프오스페치같은 물질은 소장 전체에 분포돼있다. 30센티 간격 현미경 검사는 조사비용이 더 든다. 전체 수입물량중 3%만 검사하는데 안전검사가 아니다. 대장균 살모넬라 등 병원성미생물 검사를 하겠다고 했다가 협정위반 문제가 나와 철회했다.

내장검사방법은 세계 어느나라에도 확립된 방법이 없다. 실효성이 없다. 위험물질 들여와 걸쭉내는 것 자체가 검역상 불가능하다. 검역주권도 정부는 검역강화를 주장하지만 추가협상 내용에는 검역주권 강화가 아니라 미국 도축산 승인과 취소권을 미국에게 넘겨줬고 중대한 위험발생시 한국 정부가 즉각 중단할 수도 없고 단지 협의만 요구하고 협의가 40일내에 이뤄지지 않으면 강화된 검사를 5차례 더 할 수 있을 뿐으로 되어있다.

도축장 공정자체를 중단하고 개선여부를 확인해 작업여부를 재개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전혀 못하고 검역강화했다고 주장한다. QSA 프로그램 자체가 미국 발표에도 자발적 프로그램이라고 나와있다. 실효성 없고 30개월 미만도 실효성없는 치아감별법으로 하고 있다.

첨부문서 내용에 EV 프로그램 단계적 폐지를 주장하면서 성과라고 주장하는데 미 정부 지침을 충실히 따르고 요구조건을 수행한 것을 국민 앞에 거짓말한 것이다. 이번 4월18일 수입위생조건과 2차례 추가협상만으로 안전성 확보를 하지 못했다. 재협상해야 한다.

이혜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별도로 나눠드린 추가협상 문제점을 참고해달라. 박 수의사가 주요내용을 짚었다. 김종훈 본부장이 미국협상하러 갈 때 마치 큰 것으로 얻은 것처럼 하면서 국민기대감을 잔뜩 부풀렸다. 가서명도 안된 문건 들고와 황당사기극, 희대사기극이다. 합의된 나라 사이에 간이조약, 약식조약으로 불리는 형식인데 서명이 안 된 합의문은 휴지조각에 불과하다. 국민 앞에 내놓지도 못하고 있다가 큰 거라도 얻어 온 것처럼 허황된 얘기했다.

합의본질은 업자들 사이의 양해각서(MOU)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COMMERCIAL UNDERSTANDING, 즉 업자간 양해서이다. 고시에 미국산쇠고기에 대한 한국인들의 이해를 개선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라고 나와있다. 그런데 정부는 기자회견 통해 이번 합의를 기한없이 경과조치, '기한없다'는 INFINITE라고 별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기도 했다.

최대핵심은 한시적 조치라는 것이 문제본질이고 핵심이다. 미국 축산업계가 미상무부에 보낸 서한에도 나와있다. 이번 조치는 쫓겨갈 때가 신뢰시기라고 생각한다. 한미자유무역협정 관련해 미상무부 서신을 읽어보면 미행정부는 한미FTA를 연내에 의회승인을 획득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WORK HARD) 하겠다'고 했다. 이명박은 '부시임기 중에 하겠다, 부시재임 중에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늘 아침 미의회달력을 확인해봤다. 오늘 기준으로 미하원 기준으로 40일 남아있다. 미현행 무역촉진구너한법에 따르면 90일이 필요하다. 절반도 안 남은 기간만 남겨뒀다. 연내 FTA처리는 불가능하다. 6·19 대통령 특별기자회견 6·20 미 USTR 서한을 보면 한미 FTA 사기극을 엿볼 수 있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않다. 이번 합의통해 미 대선이후 민주당이 당선되면 자동차재협상 요구할 것이고 우리는 다시 무기력하게 응해야 할 것이다. 자동차마저 간당간당하다.

우석균 보건의료연합 정책실장=참담한 심정이다. 정부주장 실상은 별 실효성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이#49919;. 언제까지 QSA 가 존재할 것인가? 미국 법령에 따르면 존속기간과 무관하게 미국 업체 이해관계에 달려있다. 판단주체는 미국기업이고 미국기업이 소비자신뢰가 확인됐다고 판단했을때 철회한다. 자율프로그램이라서 그렇다.

일시적 조치는 한미 양국정부가 아니라 미국수출기업 판단에 기초한다. 경과조치라는 말 자체가 허구적이고 추가조치라는 게 미국 판단에 근거한 매우 취약한 조치이다.

EV는 미국정부가 한국에 수출되는 제품 각각을 보증하는 것이고 QSA는 일년에 두 번 미국정부가 검사한다. 나머지는 수출위생증명서가 자동으로 발급된다. 매년 정부보증에 따라 발급되는 게 아니다. 미국에 두 번가서 민간자율과정이 제대로 이행되는가를 보는 것인데 정부보증이라고 보기 힘들다.

이 두가지 문제만 보더라도 이번 협상은, 전세계 어떤나라도, 주요 미쇠고기수입국을 보더라도 OIE 기준을 따라 전면수입한 나라는 한국뿐이었다. 그래서 반대한 것이다.

정부 대안이라는 게 시한을 알아서 판단하는 한시적조치이고 그것도 정부보증 조치가 아니고 한국사람이 실제로 많이 먹는 부위의 광우병위험을 전혀 제거하지 않았다. 4·18 조치를 다시 확고히하는 경과조치로 합의한 것은 대국민사기극이다. 지난 번고 달라진 점

은 이번에는 한국정부가 단독으로 한 것인데 이번에는 한미연합사기극이고 꿈수동맹 사기동맹에 의한 사기극이다.

이런 내용 갖고 국민비판 잠재우려는 것은 허구적이다. 백만명 넘는 국민이 거리에 나와 안전 쇠고기 먹겠다고 했음에도 이런 결과를 끌어낸 이명박정부에 대해 참담하다.

[사진3]

<<참가단체 발언>>

이상윤 인권실천사업회 사무국장=고시강행 의미에 대해 말씀드린다. 오늘 아침 식와 꿈수인 고시를 강행한 이유는 경찰폭력이 상징적으로 말한다. 앞으로 정부정책을 합리나 토론보다는 지시로 관철하겠다는 말을 한다. 이런 방식으로 여러 논쟁과 갈등을 해결하겠다는 것을 보여준다.

고시강행에 있어서 쇠고기문제만을 해결하는 의미가 아니다. 이번 고시는 한국사회 방향행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분수령이라고 본다. 불안을 토대로 미국 쇠고기 산업이 발전 중이다. 미국의 길에 동참했다는 측면에서 안타깝다.

국민 건강 관련 정책은 사전예방정책이나 사후약방문식 미봉책이나에서 정부는 후자를 선택했다. 앞으로의 한국발전방향을 미국식과 유럽식 중에서 미국식으로 간다는 것이다. 이런 정부정책에 동의한 바 없다. 국민저항이 들불처럼 번질 것이다.

<<기자질의>>

mbc권희진=추가내용 고시부칙 8항에 대한 정부 의도는?

박상표=30개월미만 뇌·척수·눈 등이 SRM 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위험이 발견될 경우 검역중단 선적중단 조치 등을 취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수입업자가 제품수입을 중단하지 않는 한 검역에서 위험이 발생하면 해당 3자가 해당업자에게 돌려준다는 것이다. 큰 문제점은 한미정부 합의문에 보면 상업적 관행에 따라 이 부위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인데 수입업자가 수입할 경우 제재조치 없이 수입돼 거래될 수 있다. 검역주권 무력화시킨 독소조항이다.

우석균='비의도적 혼입'이 됐다고 해서 반송할 수 없다는 것이 큰 문제다. 식품유해도 광우병위험물질(SRM)도 아니라면, 미국이 의도하지 않게 작은 조각이 들어갔을 경우 의도적 혼입이라 하더라도 반성조건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른 것을 수입하려고 했는데, 이를테면 한국정부가 볼살을 주문했는데 볼살에 머리뼈가 섞여 온다하더라도 반성조건이 될 수 없음을 확고히 한 것이다. 한국에서 수입을 용인하는 부분이다. 한국에서도 2006년 규정에서 4가지가 모두 SRM으로 규정됐고 일본도 그렇다. 0.001g만 갖고도 검역력이 있어서 SRM이라고 한다. 사실상 부칙하나로 봤을 때 과거보다 심각하게 악화됐다.

박상표=이 부칙 8항과 연결해 세부검역지침이 마련됐다. (그러나)작은 척수조각이나 머리뼈 등은 위험한 것으로 분류되지 않았다. 티본스테이크 등의 살코기에 들어갈 수도 있다. 척수조각을 갖고 30개월 이상이나 이하 여부를 판단할 과학적 근거는 없다. 우리 검역수단을 무력화시키는 독소조항으로 작용한다.

머리뼈도 동일하다. 조각 갖고는 더 힘들다. SRM이 섞여들어왔기 때문에 전체반송, 검역중단, 작업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게 합리적인데 이번 추가협상 통해 오히려 세부지침으로 규정해 (검역주권을 사실상)무력화했다. 그게 부칙 8항이다.

<특별취재팀/노동과세계>



노동과세계 kctu@nodong.org